



전주매일

김승수 전주시장, 지선 불출마 선언

“지역발전 위해 공부 필요”
시대정신·광역시 필요성
정치력·기득권 등 강조



김승수 전주시장이 1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1일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년 전주시장 선거가 요동치고 있다.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입지자들의 출마선언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7기 3주년 성과보고회에서 “내년 선거에서 시장은 물론 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출마 결정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치인은 시대와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선거 유리보다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고민했는데, 치열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일부 지역 정치권의 견제에 인한 공천 불확실성과 낙선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인은 항상 견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일축했다.

이날 김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전북을 팔고 갈 실효행상을 위해 공부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전주·

완주 통합 ▲사람 중심의 전주 ▲대선 주자들의 소통 ▲전북발전을 위한 광역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향후 더 큰 정치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는다.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동안 상황을 관망하던 다수의 입지자들의 출마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거론되는 후보들은 많지만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없는 상황에서 김시장 불

출마로 그동안 안갯수이었던 내년 전주시장 선거는 한결 간명해진 분위기가. 현재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출마할 입지자들은 엄습상 변화사,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이종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임정영 전 완주군수,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공작에 몸을 담고 있어 그동안 입장 발표가 부담스러웠지

만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도전의지 표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마예정자들의 부담이 줄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정치적 부패, 시대정신, 기득권, 도민 화합을 강조했다”며 “3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송 지사가 난감해졌다”고 평했다. /김윤상 기자

‘탄소중립·신산업’ 100년의 미래 연다

김승수 시장, 민선7기 3주년 맞아
“시민과 담대한 미래로 나아갈 것”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 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4대 신성장 산업 고도화, 첨단 바이오헬스 혁신 밸리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 끊임없는 변화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전주의 담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16면)

김 시장은 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선7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3년 동안 원하는 것을 꿈꾸는 상상력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 줄 아는 용기,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길러왔다”면서 “변화의 속도에 올라탈 수 있어야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듯이 혁신을 멈추지 않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빠른 일상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과 함께 더 담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리더 도시 전주! 전주다운으로 더 담대한 미래를 열겠다”는 비전 아래 향후 1년 동안 4대 역점정책과 도시경쟁력 제고 4대 프로젝트, 포스트코로나 민생활력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시장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론산업 혁신지원센터 건립, 금융기관 유치 등을 통한 제3 금융도시 지정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시는 또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계획에 맞춰 민간기업, 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바이오 헬스 혁신 밸리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 거점병원과의 협력체계와 벤처기업 유치를 통한 전주형 바이오 헬스 혁신파크 조성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 광역도시 기반 구축에도 공을 들인다. 왕복 6~8차로 간선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신호대기 없이 이동해 편리성과 정시성을 확보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한옥마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상징할 관광트램 도입이 대표적이다.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종합경기장 부지재조성과 민생활력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시장운영방향을 제시했다.

4대 역점정책은 ▲생태도시 대전환, 2050 탄소중립 선도적 추진 ▲수소·탄소·드론·금융 등 4대 신성장산업 고도화 ▲첨단 바이오 헬스 혁신 밸리 조성 ▲미래 광역도시 기반 구축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글로벌 천만 관광객도시 기반 구축 ▲천만그루 정원도시 확대 ▲책이 살아 있는 책의 도시 추진 ▲시민 생활 속 주류 지역재생 추진 등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4대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골목상권 릴레이 지역축제 ▲전시민 백신접종 체계적 대응 ▲착한연대, 소비촉진 세일 등 전개 ▲관광 회복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 상생 안정망 구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포스트코로나 민생활력 대책도 내놓았다.

전주시는 우선 미래 세대를 위해 2050년 탄소 배출량을 0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과 사회, 윤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ESG 경영을 시정에 도입하고, 탄소중립 이행 조력 및 탄소중립 세부추진계획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교육도 실시한다.

김승수 시장은 “가장 전주다운 힘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달려왔다”면서 “함께 걸으면 길이 더 큰 자랑이 되도록 뜨거운 마음과 지혜로 온 시민들까지 조성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드론축구제센터와 드

전북 친환경차 산업 육성 ‘탄력’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 중앙부처 인사 방문 잇따라
김부겸 총리도 방문... “중기부도 협력 역량 집중해 달라”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운영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 특구’로 선정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해 친환경 미래 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현황을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권한 위임장, 김익준 군산시장을 중앙과 지역인사 50여 명이 함께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고,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우수성을 살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총리는 특구지역인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를 찾아 규제자유특구사업 브리핑을 받고 LNG 중

대형 상용차 등 실증 차량 관리와 함께 탐승시연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론타워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이번 방문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한 운영성 과평가에서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아 정부가 인정한 최고특구로 자리매김을 한 바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실증이 종료되면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해 규제법령 정비도 필수적으로, 연이은 중앙 인사들의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시찰을 통한 관심은 규제

개선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전북도는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선도해 전북을 국내 최대 친환경자동차 거점지역으로 키워나간다는 복안이다.

현재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사업에는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이 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3개 사업이 실증에 매진 중이다.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이동식 LNG 충전소 실증을 위해 말까지 마무리하면, 규제개선과 사업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현장 시찰에서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LNG 상용차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전북도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전북이 친환경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발맞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IMSIL-GUN
임실군

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